

“균형발전 차원 전북 현안 국가계획 적극 반영해야”

민주 김윤덕 의원, 김부겸 총리 만나 요청... 국가균형발전에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은 16일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북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전북도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김윤덕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부겸 총리 면담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의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전북의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2000년까지 새만금의 80%가 완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감이 떨어진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새만금 남북도로 1. 2단계 건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 및 새만금 신흥항, 항만 추가 건설 등의 새만금 현안에 대해 새만금 위원장인 총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 캠퍼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 의원은 캠퍼리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총리와의 면담을 함께 건의했다.

지역구인 전주시의 현안에 대해서도 비중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전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일도없고 인구의 차이가 많이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가 아쉽게도 진행하던 국가권력전락의 핵심인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아울러 전주 역사 전면개설사업 등 전주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비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김윤덕 의원이 가장 우선으로 꼽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나의 이상과 맞아 떨어진다. 오래전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자던 꿈이 이뤄져 기쁘다”며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읍 초부터 국가중장기 SOC계획에 지역 사업 반영을 위해 강행군을 이어가는 가운데 신임 노형욱 국토부장관, 김부겸 국무총리의 인사청문 위원으로 전북 현안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한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무부처 장관들에게 전북 현안 사업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명확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사무국장 정식 임용

위원장에 이형규·사무국장에 방춘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기 3년

전북도는 16일자로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향후 3년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사무국장에 대해 정식 임용 명령했다.

지난 6월 2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출하된 전북도지사는 이형규 위원장 등 위원 7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으며, 같은 날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경로 방춘원 위원장을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선정했다.

16일 임명된 이형규 위원장과 방춘원 사무국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전북도는 도청 공영전동 1층에 위원회 사무국 조직(2과 6팀)을 신설하고, 지난 5월 28일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도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22명을 우선 배치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16일자로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향후 3년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사무국장에 대해 정식 임용 명령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시민참여광장’ 전북발대식, 19일 비대면 진행

기본소득’ 강연·토론

상임대표에 엄윤상 변호사

‘시민참여광장’ 전북발대식이 오는 19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시민참여광장’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모임으로, 이번 전북발대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북 발대식은 서울지역 발대식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전북시민참여광장’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모토로 활동하는 노동, 학술,

종교, 문화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전북시민참여광장 상임대표에는 대통령서실 행정실관 국산대리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엄윤상 변호사가 취임한다.

집행부에는 신정현 전북탁구협회 회장, 이주섭 전주시개인택시단위조합 조합장, 김태완 전북장애인체육협회 회장, 이정인 기본국가로 전북포럼 운영위원장, 박인주 군산대 자문교수, 윤경애 전주시학부모연합 대표, 임지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권활성화정책위원장, 김강운 전국대리운전노조 전북지부장, 이춘성 전북불림회 부회장, 이상영 한국청소년식물보호회 사무총장, 정윤조 전 국회의원 비서관,

송점욱 예수병원 응급실 수간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시민참여광장 관계자는 “전북지역 발대식에는 전북지역 회원 300여명이 참여, ‘기본소득’ 전도사로부터 강의 듣고, 이어 조별 토론 질의 및 응답 등이 중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엄윤상 전북시민참여광장상임대표는 “회원들의 합의를 통해 2022년 대선에서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선 후에는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나후된 전북의 정치와 경제를 도약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이상직 의원, 1심서 실형

당내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등 유죄

종교시설 내 지지 호소·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자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시을)이 당선 무효청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죄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이상직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로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종교단체 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진동수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는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에 관한 허위의 소명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도록 했다”면서 “선거캠프 차원에서 계획된 대규모 조직적인 범행으로 일부 당원들은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에 따라서 중부표를 하고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벌금 400만원 및 징역 6개월·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기초의원 3명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를 이끈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중부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로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전북도당 “전북대 인근 인덕마을 부지 청년주거 추진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이 16일 이명연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전주시가 오랫동안 도심 내 외딴 섬이라 불리던 전북대 인근 ‘인덕마을’ 부지 1만5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해 양성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당은 “우리 청년들이 특히 주거권에서 소외받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면서 “현재 청년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많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먼저 청년들이 비정규직 증가와 소득 불안정을 겪고 있고, 과거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제공하던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또 급증하는 집값은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은커녕, 세입자로서 살고 있는 곳에서 언제 내몰릴지 모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도당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청년 주거 빈곤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청년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해 청년들이 전북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농촌 인력난 등 현안 정책질의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22)는 16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5차에 걸쳐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김만기 위원장은 결산심사 시작에 앞서 “결산은 2022년도 예산편성의 토대가 되는 만큼, 지출의 적정성 여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남비적 요인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심사하겠다”며 “18일까지 전북도 결산심사를 마치고, 21일부터는 도교육청 결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은 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 상황을 청취한 후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인근 테크노센터 및 국민연금 2층사주원 진출입구 앞이 편도차선인 데다가 유치원 초·중학교까지 이어져 매우 교통이 불편하다”며 해소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은

보건복지부의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음을 지적하고,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 없이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지방 의료인력 확보와 서남대 폐교 등으로 황폐화된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만기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북도의 일반회계 및 기금 등 예치 이율이 시중금리와 비교, 적절한지를 점검하면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성과지표가 민원처리를 보다는 신고건수를 설정하는 등 목표의 부적합함을 지적하고 전 반적인 지표 내용 및 수치 점검”을 주문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은 “전북도의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많음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적

기 예산 집행을 위해 집행부가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영농철 보릿대 불법소각 시 과태료부과와 단속인력 증가가 아니라, 보릿대 적정량 처리를 위한 도의 수요처 발굴 등 처리방법 대안 제시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재 논의되는 국제금융센터 11층 규모는 일반 건물과 차별화가 안되므로 국제금융센터 건립 규모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대폭 확대 추진해 준을 대표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재원마련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22)은 매년 지방세 체납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2020년 신설된 체납징수팀의 활약을 주문하고,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농철과 코로나19 속에 농촌,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도내 곳곳에서 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과 더불어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장·단기 대책 통한 군산항 활성화 노력을”

조동용 도의원, 결산심사서

전북도의회 조동용의원(권선3·문화건설안전위원회)은 16일 제3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군산항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단기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군산항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도내 수출입 기업이 가까운



이상 도내로 오지 않기 때문에 전북도 전체 경제 구조에도 밀접하게 연계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군산항이 수심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도내 컨테이너 수출 물량의 1.8%만이 군산항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은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만 수심 준설 관련 국가예산 확보 등의 장기적인 대책 외에도 단기적으로 항만 활성화를 위한 항만전문가와 물류전문가의 채용,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투트랙 접근을 통해 쓰러져가고 있는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